

# 사회복지 주간 동향(23.8.7.~8.11.)

## 1. 용인시 정책 동향

### 1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

#### 죽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취약계층에 반찬 지원



- \*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위원장 이현주)가 취약계층 5가구에 오는 12월까지 5개월간 밀반찬을 배달하는 ‘행복나눔찬’ 특화사업을 시작함
  - 협의체는 매월 홀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저소득 가정을 방문해 반찬을 전하며 말벗이 되어주고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안부도 살필 예정
  - 이 위원장은 “외롭게 지내는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어 밀반찬 배달 사업을 마련했다”며 “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”고 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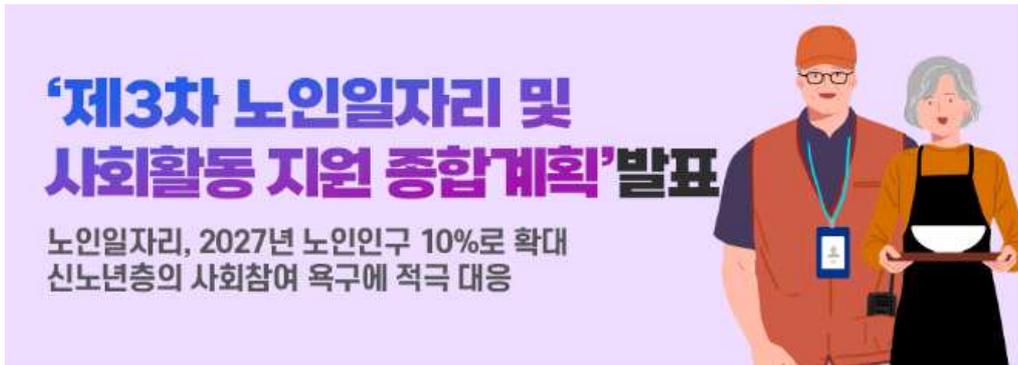
※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(죽전1동 맞춤형복지팀)

## 2. 중앙정부 정책 동향

### 1 중앙정부 복지현안

#### ‘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’ 발표

< 노인일자리, 2027년 노인인구 10%로 확대 신노년층의 사회참여 욕구에 적극 대응 >



- \*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(목)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‘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(2023~2027)’을 발표
  -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초고령 근로취약 계층인 저소득 어르신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,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‘약자복지’와 ‘일자리’를 동시에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옴
    - 국정과제 45번 中: 어르신들의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
- 1. 종합계획 주요 내용
  - \* 이번 종합계획은 제1~2차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(‘13~’17, ‘18~’22)에 이어 ‘약자복지 실현’과 ‘일자리 창출’에 중점을 두고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(베이비붐 세대)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음
    - 정부는 천만 노인 시대,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% 수준의 노인일자리 규모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수요에 대응하고, 사회서비스형·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 일자리의 40% 이상으로 확대해나감
    - 이번 종합계획은 “노년기 일과 사회참여로 존엄한 노후, 건강한 삶, 노년기 자아실현 달성”을 비전으로, ①노인인구 10% 수준의 일자리 창출, ②노인 일자리 다양성 강화, ③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하여 5대 추진전략 및 20개 추진과제를 마련함
  - \* 노인일자리 수요 대응을 위한 일자리 규모 확대 방향
    - 사회서비스형·민간형 일자리
      - (’23) 31% → (’27) 40% 이상으로 확대

- 공익활동형 일자리
  - 저소득, 75세 이상 근로취약계층 등의 소득보장 기능 및 농어촌 등 민간 일자리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적정 수준 유지
- \* '보건복지서비스 약자'를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중점 확대 분야
  -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, "일자리와 복지서비스의 선순환" 구조를 지속해나갈 계획
    - ① (고령노인 일상생활 지원) 독거 등 취약 어르신 식사·가사 지원, 경로당 이용 어르신 서비스 등 확대로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(23만명('23)→31만명('27))
    - 취약계층 식사제공, 경로식당·도시락 배달 운영, 경로당 식사·청소 및 여가운동 등 강사 지원을 확대하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도 확산
    - ② (취약계층 지원) 지역사회 아동·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, 안전 확보 사업에 노인일자리 연계를 활성화(14만명('23)→27만명('27))
  - 초등돌봄 수요에 대응해 학교 내 노인일자리 연계를 확대하고(늘봄학교), 국토부와 협업하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도 지원
    - ③ (민간일자리 지원)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세대가 전문성·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일자리도 확대 지원(10만명('23)→18만명('27))

## 2. 세부 추진과제

- \* 추진전략 1) 공익활동형 일자리 내실화
  -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수요에 맞게 제공하고, 사회적 약자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며,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도 내실화
  - 양적 조정: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단계적으로 늘림
    - 참여수당 현실화 등: 노인일자리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, 최저임금 수준 등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활동비를 지원
  - 질적 내실화: 공익활동으로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,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
    - 분류체계 개편: 노인 돌봄, 지역사회 환경 재생, 자원순환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 유형을 만들
    - 우수프로그램 확대: 돌봄 지원, 자원순환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발굴과 전환을 지원하고, 해당 사업 등을 (가칭)공익활동형 선도모델로 신설하여 우수 공익활동 모형을 확산(예시. 취약노인 돌봄을 지원하는 '노노케어', 경로당 여가·운동 강사, 자원순환 등)
    - 희망을 담은 빨래바구니: 독거, 거동 불편 어르신 빨래 수거 및 세탁·배달, 안부확인
    -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: 종이팩 수거, 세척, 건조 후 제지업체 휴지와 교환하여 취약계층 지원
    - 농촌·해양 폐기물 수거: 농약병, 폐그물 등 수거·분리해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 지원

- 제도개선: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분·선발 기준을 개선하고, 지원 기간도 확대
  - 배분·선발 기준 개선: 사업량 배분 시 지역 기반(인프라)·수요 등을 반영하고, 근로취약계층(초고령 등) 보호를 위해 참여자 선발기준을 개선
  - 지원 기간 확대: 연중 공익활동 참여에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 기간 확대(현행 평균 11개월 → 12개월)를 추진
- \* 추진전략 2)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
  - 취약계층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 기여 욕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, 외부 자원을 활용한 선도모델을 확충하여 민·관 협력형 일자리도 확산
  - 확대·개편 및 신규영역 발굴: 신노년세대의 경험·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'23년 9.6%에서 '27년 15% 이상으로 확대
  - 제도 개편: 활동 역량, 자격·경력 등 전문성 중심으로 참여자 선발기준을 개선하고, 연중 중단없는 사업 참여를 위해 근무 기간을 확대(예:현행 운영 기간 10개월 → 11개월)
  - 지역사회 문제해결: 취약계층 지원, 안전 확보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발굴을 지속 추진(예시. 늘봄학교 돌봄 지원)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늘봄학교 아침·저녁·틈새 돌봄 및 등·하교 안전관리 등 지원)
    - 공공기관 협업: 공공기관 중심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·생애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처와 직무를 확대(예시. 시니어 시설안전점검원 국토부(국토안전관리원) 연계,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 및 사후관리 지원)
  - 민·관 협력형 일자리 활성화: 기업의 사회공헌기금과 공공 부문 예산 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일자리를 개발·확산
    -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ESG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개별 사업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, 기업 특성에 맞는 모형을 채택할 수 있도록 분야별 표준 모형을 전국에 보급((성과지표(안): 목표 달성률, 전략적 사회공헌, 인적 ESG생산성, 탄소발생저감률 등, 예시.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) 지역 내 폐광지역 생태환경 보전 및 지역 문화·경제 활성화)
      - (외부자원 규모) 14.3억, (임금 수준) 월 118만 원(8개월), 142명
- \* 추진전략 3) 민간형 일자리 활성화
  - 높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·경력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세대가 민간기업에서 계속해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·창업 지원을 강화하고, 다양한 유형의 민간형 일자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 개편방안도 마련
  - 취업형 일자리 지원 강화: 민간기업과 구직노인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, 노인이 희망하는 근무 형태의 새로운 일자리도 지속 발굴

- 인센티브·시스템 개선: 노인 장기고용 달성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, 구인 구직 매칭 활성화를 위해 노인(공급자)과 구인기업(수요자)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
- 탄력 일자리 발굴·확대: 노인 근로능력, 희망시간 등을 반영하여 근무조건이 유연한 ‘탄력 일자리(Flexible Job)’도 확대 보급
- 예시. T-플랫폼 물류 매니저) 노인일자리 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서울 지하철 주요 역사 6개소에서 주 15시간 내외로 고객응대, 접수, 물품 보관·배송 등 물류서비스 지원(’23~)
- 창업형 일자리 지원 강화: 노인으로 구성된 사업단 또는 노인 다수 채용기업 (고령자친화기업)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강화
- 시장경쟁력 확보: 설계 상담, 초기 투자비 등 지원을 강화해 신규 사업단을 적극 육성하고, 노인생산품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및 온라인 (대형유통업체) 등으로 판매 창구를 확대
- 자립역량 강화: 성장지원 서비스 지원 규모를 230건(’22)에서 1,000건 (’27)으로 확대하고, 지원 일몰을 전제로 한 초기투자비 지원제도도 추진
- 제도개선: 지원단가 인상을 추진하고, 경쟁력 높은 사업단 구성을 위한 전문성 지표 강화 등 참여자 선발기준 개편을 검토
- 민간일자리 지원제도 개선: 타 사업과의 연계·차별화 등 제도 내실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일자리(시니어인턴십, 고령자친화기업 등) 개편방안 연구를 추진
- \* 추진전략 4) 정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기반 강화
  -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법·제도 기반을 구축하고, 전달체계를 개선하며,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와 민·관 협력 등을 강화
  - 노인일자리법 제정: 근로·사회활동을 통해 노인의 지식과 경험이 사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
  - 전달체계 개선: 지속 확대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성·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·지자체·담당자 등 전달체계를 개선
    - 수행기관·지자체: 사회적협동조합 등 신규 수행기관의 진입을 적극 유인하고,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개발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확대 운영하는 등 지자체 역할을 강화
    - 담당자 역량 강화 등: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업무 역량 증진을 위한 필수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채용 기준도 개선
  - 통계 기반 구축: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장기 효과분석을 위한 ‘노인일자리 패널조사’를 추진하고, 노인실태조사에 노인일자리 조사항목을 확대하는 등 노인일자리 실태조사(국가승인통계)와의 연계를 강화
  - 민·관 협력 강화: 기업 ESG 경영 기반의 민관협력 모델 발굴을 위한 MOU, 사례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, 사회공헌 기관 포상 등을 통해 사회적 확산을 도모

- 사회적 인식 제고: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노인일자리의 사회적 기여와 효과(노인 빈곤 감소, 노년기 삶의 질 향상 등)를 조명하고, 국민의 노인일자리 경험 등을 적극 발굴·홍보
- 민간형 노인일자리 확산을 위해 ‘찾아가는 설명회’·‘온라인 설명회’ 등 민간 기업, 수행기관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

※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

## 2 중앙정부 복지현안

### 취약노인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강화

< 폭염 대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통한 보호대책 추진 중 >

- \* 보건복지부는 최근 무더위로 인한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대비 보호 및 지원대책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힘
  - 어르신들께서는 폭염특보 발효 시 농사일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물 마시기와 휴식으로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함
  -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‘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’을 시행 중, 폭염 특보 발효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(생활지원사\*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서비스 이용 노인(총 50만여 명)의 안전을 확인함
    - (인원/ 주요활동) 전국 3.4만여 명/ 폭염대응 행동요령 숙지 및 사전피해 예방 활동, 폭염특보 발효 시 수행기관 인력이 일일 안전확인 및 상황보고 실시 등
    - 또한,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덕 내 어르신들의 위험 상황을 재빠르게 감지, 어르신들께서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호출기를 눌러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거나 활동량 감지기를 통해 쓰러짐이 의심되는 상황을 확인해 안부를 살피고 있음, 폭염특보 알림 및 음성신고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
      - 이 외에도 예방적 관리를 위해 폭염 대비 행동요령 및 건강수칙 포스터를 경로당, 노인복지관 등에 전달하였고, 홍보물품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 안내를 강화(포스터 8.1만 부 배부(5월), 홍보물품 건강수칙 포함 쿨토시 4만 개 배부(7월))
      - 추가로 민간기업·단체 후원을 통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 대상으로 냉방용품, 건강식품 등을 전달('22년 지원실적: 서큘레이터, 선풍기, 건강식품, 쿨매트 등 약 11.3만 명 지원(약 29.4억 원))
      - 보건복지부는 시도 및 시군구와 함께 취약노인 보호대책 이행현황을 점검하고, 폭염 대책 기간(5.20.~9.30)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폭염에 따른 노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힘

붙임 1

폭염 행동요령 및 건강수칙 안내 포스터

보건복지부

#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하세요!

**무더울 땐 이렇게 건강을 챙기세요!**

**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하세요.**

<p>가급적 낮 시간에는 <b>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.</b> <small>*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, 양산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, 가벼운 옷차림과 물병을 휴대하세요.</small></p>	<p>냉방기 사용 시 적정 실내온도 (26℃~28℃)를 유지하고 일정한 시간마다 환기하세요.</p>
<p>물을 자주 마시고, 카페인과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자제하세요. <small>* 신장질환자의 경우 의사와 상담 후 물을 마시세요.</small></p>	<p>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커튼 등으로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하세요.</p>

**몸에 이상을 느끼게 되면 이렇게 하세요!**

**현기증, 메스꺼움, 두통, 근육경련 등 몸에 이상을 느끼게 되면**

<p>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세요.</p>	<p>옷을 느슨하게 하고,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세요.</p>
<p>물을 천천히 마셔 수분을 보충하세요.</p>	<p>119에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세요.</p>

**응급상황 시  
비상연락처**

**119 중앙응급구조대**  
구조, 구급 등 긴급상황 시 연락

**129 보건복지상담센터**  
건강상담과 복지생활 지원요청

※ 보도자료 참조(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)

### 3 중앙정부 복지현안

#### 폭염 대응, 경로당에 냉방비 10만 원 추가 지원한다

- \* 보건복지부는 연일 계속되는 재난급 폭염에 대응하여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6만 8천 개 경로당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힘
  -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, 대부분 무더위쉼터로 지정(약 4만 4천 개)되어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
  - 보건복지부는 국비 지원 경로당 6만 8천 개를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월 10만 원 총 68억 원(국비+지방비)을 추가 지원
  - 이번 조치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검토한 것으로, 폭염에 대비하여 2022년에 11.5만 원 지원되던 경로당 냉방비를 올해 7월에 12.5만 원으로 인상한데 이어, 이례적인 폭염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것

구분	'22년	'23. 7월	'23. 8월	비고
경로당 냉방비 지원 (7~8월, 2개월)	월 11.5만 원	12.5만 원	22.5만 원	7월 대비 10만 원 인상

-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무더위에서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에 인상된 냉방비가 경로당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

※ 보도자료 참조(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)

## 4 중앙정부 복지현안

### 보건복지부, 폭염 대응을 위해 8월 한 달 경로당 운영 시간 연장 권고

- \* 보건복지부는 8월 4일(금)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 증가 등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8월 한 달간 경로당 운영시간을 연장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힘
- 이번 조치는 이기일 제1차관이 8월 4일(금) '목적경로당'(서울 중구 소재) 무더위 쉼터를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이례적인 폭염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짐

<경로당 운영시간 연장 권고>

구분	현재	운영 권고(8.31일까지)
운영시간	시설별 운영규정에 따름 (통상 9~18시)	연장 운영 권고 (평일 및 주말·공휴일 9~21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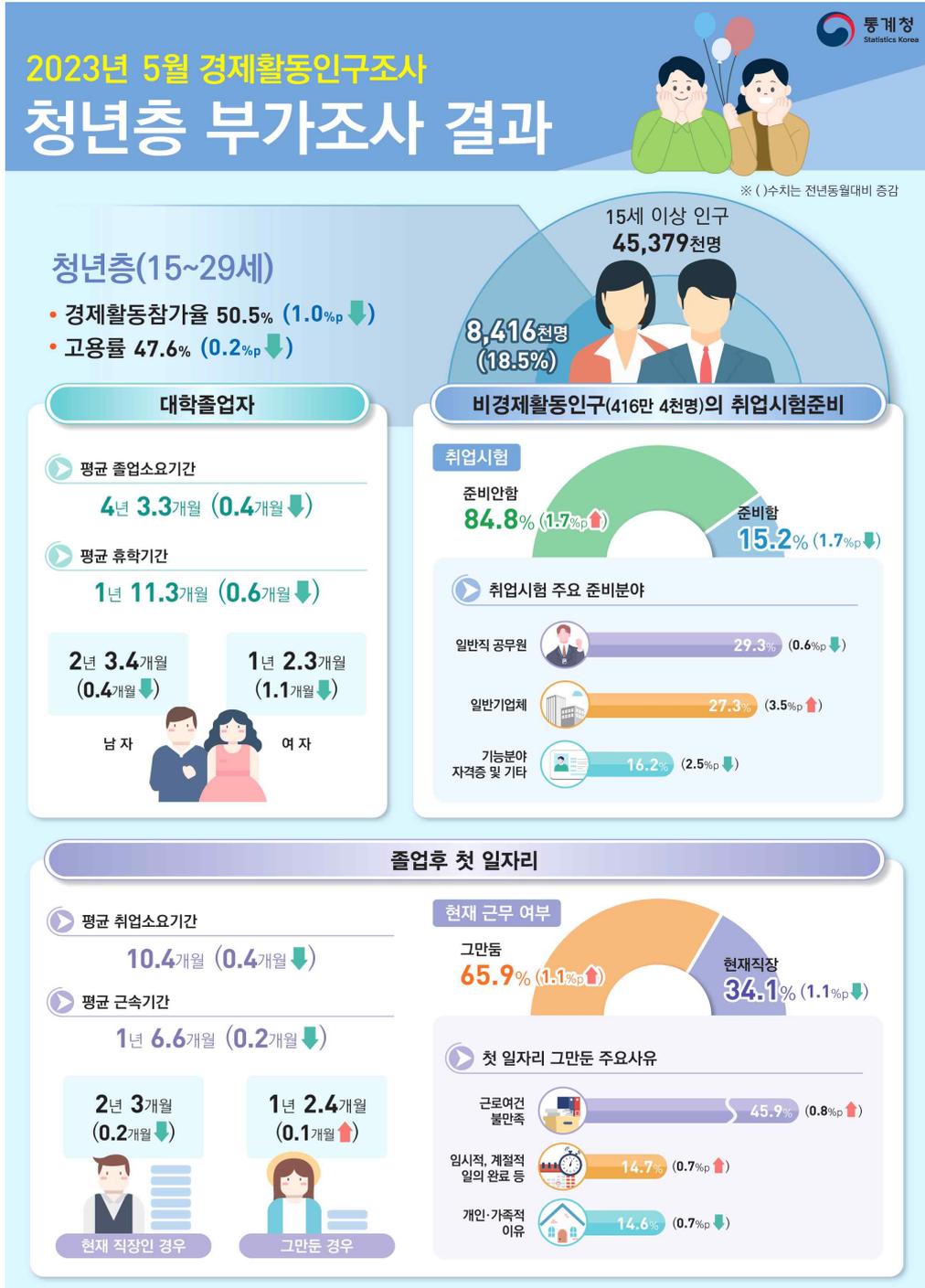
- 기간은 필요시 연장 가능, 경로당 비회원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개방 요청

※ 보도자료 참조(복지정책관 노인지원과)

# 3. 통계로 보는 복지

## 1 중앙 통계현안

###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[청년층 부가조사 결과]



※ 자료 : 통계청 자료(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)